孫, 모든 세력 한번에 전당대회 '원샷'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朴, 민주당 전대 뒤 단계적 통합 '투샷'

〈박지원 등 차기 당권주자〉

민주 야권 대통합 방식 논란 격화

야권 대통합 추진 방식을 민주당 내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모든 세력이 한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정당을 출범시키는 '원샷 전당대회'를 추진하려 하지만 차기 당권도전자들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 통합정당을 건설하자는 '투샷 방법론'이 제기하고 있다.

손 대표 등은 민주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통합 대상들이 민주당의 통합 의지를 의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을 하더라도 다른 세력과의 지분나누기 등 구태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先) 민주당 전대 개최'에 부정적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통합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스스로 작은 기득권과 자존심에 도취돼 갇히면 도도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도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나아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면담하고 통합정당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 통합행보에 속도를 냈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권 제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전대를 지향점으로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날 "민주세력과 노동세력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진보세력의 지향점"이라며 "우리가 수권정당이 되려면 노동세력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은 정치의 당당한 주주로 참여할 때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정치적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향후 민주노총 이수호 전 위원장 등 민노총의 전직 지도부를 상대로 통합정당 참여를 요청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사회 세력과도 적극적인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문학진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시 전대를 치른 뒤 통합전대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고 주장했고, 이종걸 의원도 "민주당의 단독 전대 개최는 통합의 거부와 마찬가지"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대를 준비해온 대다수 주자들과 통합을 통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전대를 먼저 치른 뒤 나머지 세력과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에 반대해 통합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혁신과통합'은 정당이 아니어서 합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 밖의 친노(親盧) 그룹은 새로운 통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혁신과통합은 법적으로 합당이 아닌 입당·복당·영입의 대상"이라며 "더군다나 통합 수임권을 갖지 않은 현 지도부가 자체 전대 없이 통합전대를 추진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1%의 지도부는 혁신의 목소리를 통합의 대의로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대철 상임고문도 "민주당 단독 전대를 한 뒤 통합전대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들도 민주당 전대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태세다. 당헌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대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과통합' 측 일부 인사들도 원샷 통합전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샷 전대를 개최하면 인지도나 세력에서 앞서는 민주당 전대 주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정현 의원 로스쿨 취업박람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전국의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1층 리셉션홀에서 '2011 대한민국 로스쿨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기업법무협회와 'In-House Cousel Forum'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률저널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력 전문 취업박람회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로펌,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박람회 홈페이지(http : //www.kclaa.or.kr)에 사전등록한 예비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실시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 지하 1층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광주통합연대 윤난실 등 공동대표에

(가칭)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광주 통합연대'가 지난 4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조승수 통합연대 공동대표와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공동대표로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과 안남렬(사업가)·황광우(작가)씨가 선출됐다. '광주 통합연대'는 이른 시일내에 창당준비위 결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창조한국당 새 대표에 한면희씨

창조한국당은 한면희(55) 전 녹색대학 대표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7일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창당 4주년 기념행사 직후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공성경 대표 후임으로 한명희 대표를 선출했다. 한 대표는 대표 수락사에서 "나라의 정치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구현하면서 창조적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며 "창조한국당이 이 길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완도군수 예산확보 총력

김종식 완도군수가 최근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된 지역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군수는 박삼재 완도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원인 김영록 국회의원에게 정부예산에서 제외된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완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과도 잇따라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완도군의 2012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은 864억원이었으며, 이중 62억5000만 원이 미반영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정의화 의원 광주서 저자 사인회

영호남 화합 활동 담아 … 전남대 특강도

'동서화합의 전도사'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동구) 국회부의장이 광주에서 자신의 정치역정과 철학을 담은 저서 '이름값 정치(나라鄭, 옳을義, 화합할和)'에 대한 저자 사인회를 열었다.

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서림에서 열린 사인회는 지난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2일 지역구인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정 부의장은 저서에서 '동서화합'과 관련, "동서로 대비되는 영호남의 지역갈등은 당사자들인 영남과 호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과거에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인 이불균형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도 동서화합이 우선"이라면서 "화합해서 동서가 함께 성장을 도모하면 대한민국의 국토는 균형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7시 전남대 행정대학원 대강의실에서 최고정책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사회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특강도 실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서점 3층 갤러리에서 열린 '이름값 정치' 출판기념 사인회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저서에 서명을 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與도 野도 "복지확대"

국회 예산심사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1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326조1000억원의 0.05%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흡하다.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과감히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반값등록금 실현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정부 제출 예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매각대금 2조3000억원을 세외수입예산으로 잡았다"며 "이들 3개 공기업의 정부보유 지분매각은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민적 저항 등으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예산에 투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과감히 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민생 및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 조정을 통해 마련된 모두 10조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2조원)·반값등록금 실현(2조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1조원) ▲지방재정 부족지원(1조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어르신 지원(8000억원) 예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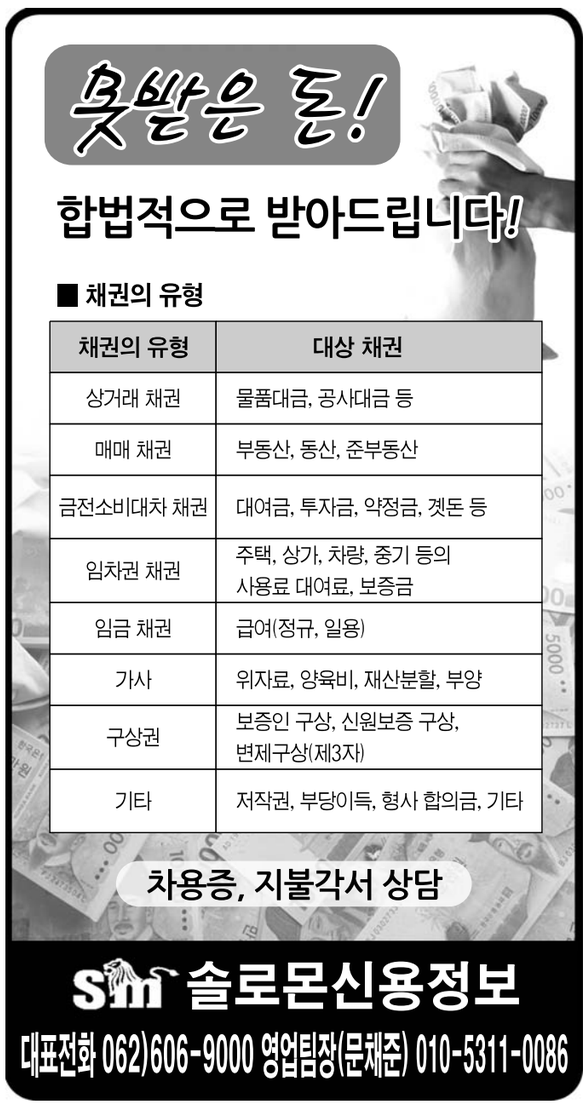
與, 쇄신안 발표 한미FTA 처리 이후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마련해온 쇄신안의 발표를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뤘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된 당내 쇄신 논의는 이제 출발단계"라며 "앞으로 쇄신 연찬회, 끝장 토론을 통해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홍 대표는 중앙당사 폐지 및 당 조직 혁신, 비례대표 의원 50% 국민참여경선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한 정치신인 영입, 당·민정책협의회 등을 내용으로 한 '1차 쇄신안'을 이날 최고위에 제시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쇄신안을 놓고 당 지도부는 물론 계파·세력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인 데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안 제시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쇄신 논의를 위한 첫 의원총회를 오는 9일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